

‘고소·고발’ 양금 못던 박 시장-與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오해는 풀렸지만 여전히 어색... 냉랭...

고소·고발사태로 까지 비화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 모였지만 감정적 양금은 털어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간 정책간담회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박 시장의 낮은 자세 속에 그 동안 쌓였던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국회의원과 광주시의 정책 간담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가운데)이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시장 “부덕의 소치” 낮은 자세로 일관
여의원 의견갈려 고소취하 결론 못내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한 의원들의 공격=이날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시장과 의원 간 갈등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회해 제스처 보낸 박 시장=하지만 박 시장은 이날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그는 간담회 동안 모두 인사말과 마무리말 등을 통해 “감사하다”란 말을 8번, “죄송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썼다.

◇회해는 언제나=시민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예산 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의 갈등관계를 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고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명의 광주 국회의원은 간담회 직후 인근 호텔에서 고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30여분 동안의 논의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참석 의원 모두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봐 고소 취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시장 검찰조사=한편 광주 R&D(연구·개발) 특구지정 발원 등과 관련, 광주지역 여당의원들로부터 고소당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17일 밤 광주지검에 출두해 1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을 상대로 5·3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광주 R&D 특구지정이 무산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J프로젝트등 현안사업
국고 확보 공동보조”

전남도-민주당 정책협의회

전남도와 민주당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8일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를 확보하는 데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한화갑 대표와 장 상 공동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는 J프로젝트와 관련해 간척지의 조기 양도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등을 적극 건의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의 국립 건립 지원, 각종 외교활동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완도를 비롯한 지역 내 5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비롯, 공항과 연륙·연도교 건설, 동북아 물류항만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은 임기중엔 개혁보다 관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盧 대통령, 일부 언론사 간부 만나 심경 토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사 간부와 만나 “남은 임기동안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기존 정책들을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도 일부 언론사 통일,외교담당 논설위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지지를 고민을 거의 안했는데 최근에는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 하면서도 김영삼, 김대중 전임 대통령 집권 후반기 시절 지지율을 거론하며 “요즘 내 지지도가 19%라고 하는데 전임자들보다는 낫다”는 자신감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지를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한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 오라실, 상품권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다룰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개혁을 많이 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변화시켜 후임자에게 넘겨주겠다”며 “누가 온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과 잘해서 물러가야 하는 마음이 반반이지만 그렇다고 정부 관리를 허술하

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차 회답이 재계되지 않고 있는 등 북핵문제 교착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합리적인 판단이 빛나갈때가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북한의 비상상황 발생시의 작전계획 5029는 다시 짜야 한다”고 밝힌 뒤 “중국은 국경까지 미군이 오는걸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 비상상

황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문제를 처리할 우려도 있는 만큼 북한 비상상황 때 우리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일반민족 재산조사위 출범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헌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 의회 의원이나 종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연합뉴스

시 설

1천원어치 팔아 57원 버는 지방기업

광주·전남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추세여서 지역 경기 회복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위축을 불러오고 결국 지역민 소득이 줄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기업 22곳 가운데 8곳이 적자였다.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인 1.9% 늘었으나 영업이익률은 34.5%나 줄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도 5.7%에 불과했다. 1천원어치를 팔아 겨우 57원의 영업이익을 낸 셈이다.

이 같은 광주·전남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반면 영업이익 감소율은 4.5배나 높은 것이다. 1천원어치를 팔았을 경우 버는 돈도 9원이나 적다. 지방기업의 경영이 위기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상장기업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경영 환경이 훨씬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형편은 미루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지역민 소득이 줄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유가, 원자재, 환율 등 교역조건이 나빠진 데 따른 것으로 지방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에 비해 교역조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방기업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방기업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몰락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수도권공약총량제 완화나 대수도권론을 부르짖을 시점이 아니다.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특단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출산을 세계 최저 ‘인구 재앙’ 현실화되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화국(PRB)이 발표한 ‘2006세계인구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산율 1.2명보다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었고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도 1.6명이나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 4천850만명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5년 중반 4천 98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2050년 중반에는 4천230만명으로 지금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을 저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가 줄어들어 국가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노인층은 급증해 사회적 부담비용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젊은층의 감소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낼 사람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을 꾸러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었고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도 1.6명이나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 4천850만명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5년 중반 4천 98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2050년 중반에는 4천230만명으로 지금보다 13%



18일 오전 고 강원용 목사의 서울대학교 빈소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화 후 복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목사 영원히 존경과 사랑 받을 것”

DJ, 고 강원용 목사 빈소 찾아

“강 목사님 만큼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었는데..”

18일 오전 개신교회 원로 고 강원용 경동교회 명예목사의 빈소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인의 업적이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김 전 대통령은 강원용 목사를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일생을 사신 분”으로 평가하고 “한 국민으로서, 원로 지도자로서 한국의 민주화, 사회정의, 문화발전, 남북 화

해협력, 세계 평화의 문제가 있어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문 뒤 개신교 원로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강 목사님 만큼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었는데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빈소를 함께 찾은 이희호 여사도 “갑작스럽게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1970년대 들어 김수환 추경경, 함석헌 선생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뛰어난 고 강원용 목사는 김 전 대통령 등이 재야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고인은 특히, 5공 정권에 국정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생전에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씨의 생명과 나의 명예를 맞바꾼 결단이었으므로 후회는 없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including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long with phone and fax numbers.

빛의만평

- 김중두



이쪽 태풍도 복잡하니 그냥 가도록..

국방위, 송민순실장 ‘답변거부’ 논란

NSC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한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중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송 실장은 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핵 동향과 전시작통권 환수 등 안보현안에 대해 질의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인 NSC법 개정안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NSC 운영 지원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돼 있다”면서 “오늘은 사무처장 자격으로 나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은 “사무처장이 대통령과 NSC 구성원간 흐름에 대한

객관적 이야기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NSC 사무처장을 대통령의 통의외교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이 겸임토록 한 법 정신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신나간 사람 아니냐”(이인제), “태도가 왜 그래”(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라고 질책했고 송실장은 “인격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반박하는 등 언쟁이 벌어져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실장 답변거부에 대한 항의표시를 집단 퇴장했고, 김성근 국회의방위원장은 세입세출 결산소위로 안건을 넘긴 뒤 곧 바로 퇴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